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최근 광주의 한 첨단 유망 중소기업이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우울한 소식(광주 일보 2월13일자 1면)이다. 광주 첨단산단에 소재하고 있는 솔린시스(주)의 이야기다. 이 회사는 터치패널 원천기술의 보유업체로 기술력만큼은 지식경제부가 인정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식재산센터의 글로벌IP스타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와 공인기관에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인정한 것이다. 광주시가 5100㎡ 부지를 무상 제공하면서까지 솔린시스를 유치한 이유다.

'이방인'으로 전락한 지방

하지만, 이 회사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금융권의 부실 리스트에 올랐고, 공장설비는 기압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단전 조치까지 됐다. 광장 문을 연지 1년여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솔린시스 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금난이다. 투자자들이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투자협상이 깨진 게 다반사였다고 한다. 결국 '지방'이라는 글에 얹여 날개를 펴지도 못한 채 주저앉을 상

황이 된 것이다.

솔린시스의 상황은 지방 중소기업과 지방경제의 자화상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를 떠나온 지방의 항토 기업들은 거의 사라졌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지방에 남아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하청·하도급으로 겪

실종된 '지방경제' 어떻게 찾나

우 명맥만 이어 가고 있다. 지방기업의 자생력은 상실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들이 온갖 유인책을 내놓으며 기업유치에 목을 맡고 있지만 별무소득이다. 어렵사리 유치한 기업들도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거나 수도권으로 U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방은 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적막한 토양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지방경제가 활력을 잃고 겨우 숨만 깔딱거리는 이유다.

기업들이 왜 지방을 외면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에만 오면 고사(枯死)하는가.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그 답이다. 규모를 떠나 기업활동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사람·기술력·돈'이다. 이 세 가지 자양분이 서울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으니 어느 기업, 기업인이 지방을 쳐다나 보겠는가.

문제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지방의 실상을 보면서도 팔짱끼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힘을 지속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MB정부에서는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기업 출자총액 평균 대표적 사례다. 이 결과로 MB정부와 여당은 '양극화의 끝'에 걸려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과제인데도 말이다. 정치권이 총선 승리와 집권에만 몰두해 정작 문제의 본질인 지방의 실상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방은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취업하려 해도 변변한 기업을 찾을 수 없다. 아예 '비벌 언덕' 조차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들이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지방은 '근육위축증' 환자처럼 마냥 꼬그라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을 선거 선택 잣대 돼야

요즘 각 정당이 쏟아내고 있는 장밋빛 공약도 실상은 선거용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지방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어떻게 균형발전, 서민 위주, 동반성장의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 전 국토의 88%가 지방이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 삶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가.

을 종선과 대선에서는 '지방경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지방에 더 관심을 갖는지, 지방을 희생시킬 능력이 있는지 생활이 판단해 '심판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 또다시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폐거리 정치나 자연·학연·혈연에 얹매여선 지방은 '이방인' 신세를 면할 수 없다. 특히 광주·전남은 더욱 그렇다.

(논설장) jhjung@kwangju.co.kr

기고

대학 진학지도 학생 중심으로 바꿔어야



김왕복

대학 졸업과 입학 시즌이다. 원하는 직장을 잡은 졸업생들의 마음은 새롭처럼 가볍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울 것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은 올해 대졸자 취업난이 어느 때보다도 심했다. 4년제 대졸자의 과반이 백수이고 취업자의 40%가 연봉 1800만 원이하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4년제 대학 선택 결과의 현주소다.

대학진로는 기본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학생과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들은 선생님들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는 학생들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부 잘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4년제 유명대학 유명학과에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무조건 4년제 대

학이 전문대학보다 낫다는 식으로 진학지도를 하면 다음 사례처럼 학생들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1. H씨의 장남은 4년제 사립대 유수학과를 차남은 C전문대학 화공과를 졸업하였다. 장남은 선생님의 진학지도와 본인의 의사에 따라 4년제를 선택하고 차남은 아버지의 권유로 학비가 싸고 취업 전망이 좋은 전문대학을 선택하였다. 졸업 후 현 상황은 장남은 자영업을 준비 중이고 차남은 대기업에 생산직으로 취직하여 자가용을 물려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2. 국립대 사대 과학교육과 재학생인 J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학령 아동이 줄어 혼란과 교사 부족으로 인해 학생수를 매년 4년제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학생들 약 100여 명이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중심으로 재입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등록 신입생들 중 상당수가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등록금을 환불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전체적으로 대학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변화가 여러 방면에서 감지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여 의사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졸자들을 '선 취업 후 진학'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대학진학률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2003년 83.8%를 정점으로 하여 2011학년도에는 72.5%까지 떨어졌다. 둘째 전문대학교에 대한 입학지원자 증가율이 4년제 대학교보다 앞서고 있고 취업률도 전문대학이 60.7%로 4

년제 대학 54.5%보다 훨씬 높다. 셋째 대기업은 간부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하여 뽑는데 4년제 출신은 생산직에 응시할 수 없다.

대기업 취업은 모두의 로망이다. 그러나 올해 30대 대기업 공체 인원은 12만 명인데 이 중 대졸자는 8만3000명 정도다. 항상 표준을 지향하는 삼성은 4년제 9000명, 전문대 3000명, 등 총 2만6000명을 모집한다. 삼성의 모집 구성비를 전체에 적용할 때 4년제 출신 간부 사원 모집 인원은 6만 명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고졸자를 60만 명으로 봤을 때 10% 정도만이 대기업 간부 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기업 간부사원이 50대 이후까지 생존할 확률은 약 20% 정도이고 상무 이상 임원까지 승진할 확률은 약 0.6% 정도밖에 안 된다. 반면에 전문대학생이 취업하는 대기업 생산직은 간부 승진에는 제약이 있으나 정년이 58세 정도로 보장되어 있고 월급 수준도 간부 사원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대학 진로지도는 정부 정책과 취업 환경 변화 등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학교와 학과 중심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발상 전환을 기대해 본다.

(조선이공대학교 총장·행정학박사)

불어 사는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는 경쟁과 성과에만 매달리는 시장의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이 남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100세 수명을 내다보는 '에이징 파워(Aging Power)'를 구축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삶과 사회적 공생을 지향하는 호모 앤파티쿠스(공감·共感)의 인간, Homo Empathicus)를 위한 장이어야 한다.

암하야인의 식사 초대장에는 "와서 우리의 손님이 돼주세요."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식사하라 오세요."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같이 먹는 기쁨을 즐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정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친애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배울었느냐이다. 우리 아이들도 이를 배우고 누릴 권리가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장학사)

미래를 위한 학교문화

온펜칼럼



김창관

20세기 이후 우리 사회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재부족을 꿈꾸는 우리의 갈망과 노력의 성과였다. 정형화된 교육 방법으로 전수된 표준화된 지식은 비속련공을 속련된 인재로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는 산업 발달의 기틀이 되었다. 하지만 자동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과 신자유주의 흐름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시형 박사는 "40대 은퇴, 100세 수명시대, 지금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공부·취업·은퇴'

라는 관습적 사이클 대신 '평생 공부하고 도전하는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기여주는 교육이 중요할까.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핀란드 교육철학은 사회구성주의를 지향한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지식은 어떤 목적이나 가치관이 전제된 것이며, 학습은 단순한 지식 수용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지식을 탐구하고 구성하는 주체적 활동이다. 진정한 교육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기성세대의 관념에 숨어있는 신분 상승, 차별, 경쟁의 도그마 속에서는 '대학 진학'과 '눈앞에 보이는 유망 직업' 외에 다른 목표가 설 자리는 없다.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물이 아이들 자신보다 더 존중되는 학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는 어렵다. 아이들의 내적 리듬을 발견하여 이를 미래의 힘으로 발현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일방적 자대로 재단

하여 결핍의 아픔을 가중할 뿐이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지수 면에서는 하위권을 면치 못한다는 점은 효율과 성적에 치중하는 기능주의적 교육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미 졸업장으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UN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현존하는 직업의 80%가 10년 내에 사라지거나 전화할 것이라고 한다. 10~15년 후에는 한 사람의 서너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29~40가지의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도 '자신의 호기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평생을 일과 여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무엇을 찾아 가는 사람, 전 지구적 공동체에서 남을 배려하고 더

하는 결핍의 아픔을 가중할 뿐이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지수 면에서는 하위권을 면치 못한다는 점은 효율과 성적에 치중하는 기능주의적 교육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타이어 공기압 관리 소홀 대형사고 발생 우려

운전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보면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다니는 차들을 자주 본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을 경우 자동차의 안전에는 중대한 위험을 준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험한지는 잘 모른다.

타이어는 차체의 중량에 의해 눌리면서

바다면이 약간 들어가 타이어의 모양에 변형이 생긴다. 바퀴가 구르면서 바다에 닿았던 부분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다시 바닥에 닿을 때 둘리며 변형이 생기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게 된다.

타이어의 이런 정상·변형의 반복운동은 타이어의 공기가 적을 경우 변형된 타이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방해하게 된다. 광주

유는 대부분의 경우 차량전복이나 뒤따르던 차와의 연쇄충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타이어 파손을 예방하려면 정상적인 타이어도 공기압이 누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1~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기압을 체크해야 하는데, 타이어 옆면에 적힌 적정압보다 10% 정도 높여주는 것이 고속주행에 적당하다.

운전자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간과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온 가족을 위험에 빠트리게 되니 항상 신경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은진·광주시 서구 덕흥동

오피니언

시설

뿌리째 흔들리는 전남교육 회생 방안 없나

인구 감소·출산 저하로 학생 수가 격감하면서 전남 공교육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학생 수가 없어 이미 초·중학교들이 수없이 통폐합됐지만, 그 여파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고사 위기의 전남 농어촌 교육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집계한 2012학년도 초·중·고교 학급 및 학생 수는 총 837개교 25만1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학교 1개교, 학생 1만500여 명(4%)이나 줄었다.

더 큰 문제는 학생 수가 2008년(-5258명), 2009년(-7260명), 2010년(-9232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지방에 더 관심을 갖는지, 지방을 희생시킬 능력이 있는지 생활이 판단해 '심판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 또다시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폐거리 정치나 자연·학연·혈연에 얹매여선 지방은 '이방인' 신세를 면할 수 없다. 특히 광주·전남은 더욱 그렇다.

혁신도시 내 '일탈행위' 엄히 다스려야

특히 혁신도시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합은 전남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에서는 이 사업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일부 업체들이 사업단의 말을 믿고 20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단의 이런 일탈행위가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의 대역사 현장에서 구시대적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혁신도시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참여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공사 차질은 물론 지역 이미지도 실추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기획단과 나주시는 건설업체와 납품업체 등에 사업단의 실제를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 업체들에게 공사 입찰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사업 참여 조건으로 계약금의 3~4%를 커미션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조합으로서의 면도 저하되며 록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의 대역사 현장에서 구시대적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혁신도시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참여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공사 차질은 물론 지역 이미지도 실추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기획단과 나주시는 건설업체와 납품업체 등에 사업단의 실제를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비록 여부도 파악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경찰도 사업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엄히 다스려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국 한나라 경제(景帝) 당시 어사대 부를 지낸 직불의(直不疑)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가 낭관(郎官)으로 근무할 때 같은 방에 거기하던 동료가 휴가를 떠나면서 다른 사람의 금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간 동료를 돌아오면 오해가 풀릴 것을 알고 있었고, 덤으로 평판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얻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공개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반론이 이해가 안 같다"며 강정싸움을 벌이는 모양새

다. 하지만, 더 이상 해명을 미룬다면 자신을 서울시장이자 새로운 정치지도자로 만들어 준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

직불의 진가는 초기 대처를 잘했다는 점에 있다. 박 시장이